

[단독] 대구경북영어마을 150억원대 '보조금 부정' 덜미 잡혀

8 김대호 기자 | 승인 2023.10.11 20:08

강사비·근로장학금 등 부당청구 혐의
일괄인출·사후정산·사업비 내역 무단변경 문제도

경 고 장

기 관 경 고

기관명 : 대구광역시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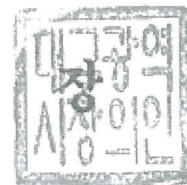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청은 「지방보조금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할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 ‘영진전문대학’은 수년간 중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경북 칠곡군에 소재한 ‘대구경북영어 마을’에서 보조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그런데 은 보조사업자 ‘영진전문대학’이 보조금을 일괄 인출한 뒤 사후 정산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보조사업 전용 통장에 자부담을 예치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검토 없이 보조금을 교부한 점, 보조사업 정산 검토를 소홀히 한 점, 보조금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한 점 등 ‘영어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보조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위 사실과 관련하여 귀 기관을 엄중 「경고」하니 향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3. 4. .

대 구 광 역 시



▲ 대구광역시가 지난 4월 '보조금 부패 신고에 따른 감사 지적사'와 함께 대구 시내 8개 구군청에 기관경고장을 보냈다. 사진은 그 중 한 지자체에 대한 공문.

경북경찰, 권익위 의뢰로 수사

대학 측“업무미숙·실수 인정,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

올해 경기침체에 따른 역대급 세수 급감이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재정건전성 확보와 부당한 보조금 차단을 잇따라 주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영진전문대 부설 대구경북영어마을이 6년(2016~2021) 간 150억원 대 '보조금 부정' 혐의로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경북영어마을은 영어체험학습 보조금을 대구시와 대구지역 구군청, 경북도와 시군 등으로부터 받아 원어민강사 인건비, 근로장학생 장학금과 영어마을 식당 운영 등에서 과다청구·부당지급·일괄인출·사후정산·사업비 내역 무단 변경 등 '보조금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대구시·경북도는 대구시내 구군청과 도내 시군 함께, 칠곡군에 있는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초중학생 들 등을 대상으로 한 체류형 영어체험학습을 위해 최근 문제가 공익신고로 불거지기 전까지 한해 80억~100억원 정도를 지원해 왔다.

경찰의 수사는 지난해 7월 공익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실시한 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지난해 12월 대구시·경북도 통보와 동시에 경북경찰청에도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올 들어서 국민권익위의 자료와 공익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현재 '보조금 부정' 금액과 대구경북영어마을과 관계자들의 횡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확보와 검토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영진전문대 관계자는 "보조금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보조금 관련 정산에 대해 업무미숙이나 실수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입장과 내용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권익위로부터 통보 받은 후 자체 조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해 분 보조금에 대한 꼼꼼한 정산을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주문하는 한편 내년 대구경북영어마을 체험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쪽으로 관련 조치를 취했다. 경찰의 수사가 끝나고 '보조금 부정'과 횡령여부 등 금액이 특정되면 환수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일부 기초지자체에선 지난 2022년 분 보조금에 대해 정확한 정산을 요구하고 그 결과 과다지급된 보조금이 확인돼 대구경북영어마을 측에 환수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현재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확인해야 할 문서와 관계자들이 많이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한편 영진전문대는 지난 2014년에도 학교 공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설립자 A씨와 당시 이 대학 교수 B씨가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영진전문대는 교비 횡령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도 안돼 이번에는 '보조금 부정' 문제가 터졌다.

김대호·권순광 기자



김대호 기자 homigod@naver.com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